

건설소식

‘건교부’가 ‘국토해양부’로

해양수산부 일부 및 산림청 흡수 14년 만에 간판 교체

건설교통부가 해양수산부 일부와 산림청을 흡수, 국토해양부로 확대 개편된다.

지난 1994년 건설부와 교통부가 합쳐져 태동한 이래 14년 만에 ‘국토해양부’로 간판을 바꿔달게 된 것.

조직이 비대해 지는 국토해양부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돼 주택·건설부문과 교통·물류부문을 나눠 맡게 될 전망이다.

산하 외청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산림청 등 2개로 늘어난다.

건교부는 현재 ▲정책홍보관리실 ▲물류혁신본부 ▲건설선진화본부 ▲기반시설본부 ▲주거복지본부 ▲국토균형발전본부 ▲생활교통본부 등 1실 6본부 체제이며 별도기관으로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이 있다. 또 소속기관으로 항공안전본부와 지방항공청 2곳, 지방국토관리청 5곳을 두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들은 이번 조직개편을 해양수산부에 넘겨줬던 기능을 되찾아 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육상물류와 항공물류는 건설교통부에서, 해운물류는 해양수산부에서 맡았던 이상한 모양새도 바로잡힐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과거의 기능을 다시 갖게 됐지만 조직모습은 이전과는 다르게 짜일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1명의 사무관이 해운항만청과 연락하는 정도의 업무만 했으며 실제로 해운항만청에서 정책기능과 집행기능까지 맡았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되면 정책기능에다 ‘일부’ 집행기능까지 갖게 될 것으로 보이며 해운항만청과 같은 별도의 집행기관은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가 집행하기 어려운 기능은 산하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맡게 되며 항만과 관련된 집행기능은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등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해양부 내에는 해운물류정책과 항만정책기능, 해양정책기능을 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본부를 두는 방안과 별도의 본부를 두지 않고 기존의 물류혁신본부와 기반시설본부내에 국을 두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가 되면 현재 800여명인 건설교통부 본부의 인원은 1천 100여명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소속 지방청의 인원은 3천300명에서 5천700명으로 늘어난다. 이와 별도로 150명 수준인 행복도시건설청과 1천600명 수준인 산림청을 소속 기관으로 갖게 된다.

학·경력 기술자 승급 주의

교육훈련 2월 29일 까지 마쳐야 가능

학·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한 제도변경으로 승급을 원하는 기존 경력기술자들은 오는 2월 29일 까지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학·경력자 중 중급~특급 승급이 가능한 기술자와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중 특급 승급이 가능한 기술자는 승급교육 유예기한인 오는 2월 29일 까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승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기술자는 지난 해 2월 말까지 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에 건설기술자로 등록해 경력을 신고한 기술자 중 △기사 또는 산업기사 취득자 중 기술경력이 특급승급에 해당하는 자 △학·경력자 중 기술경력이 중급~특급 승급에 해당하는 자 등이다.

또 승급교육 이수 해당자 중 최초 교육훈련인 기본교육 2주와 전문교육 1주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최초교육 및 승급교육을 모두 이수해야만 승급이 가능하다.

교육기관들은 기술자제도 개선으로 지난해부터 특급기술자는 기술사자격 소지자에게만 허용됨에 따라 특급기

술자 승급대상인 기술자들은 관련교육을 이수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작년 건설분야 중재사건 “깡충”

2006년 56건에서 144건으로 157% 상승

지난해 건설분야의 중재사건이 직전년도인 2006년에 비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건설중재 사건은 지난해 144건으로 직전해인 2006년 56건에 비해 157% 증가했고, 분쟁금액 역시 2006년 351억 원에서 827억 원으로 136%가 늘었다.

이처럼 건설분야 중재사건이 급증한 것은 민간사업자간 분쟁이 늘어나면서 민간건설 분야의 중재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간건설분야 분쟁비중은 전체 144건 중 125건을 차지하면서 2006년 61%에서 87%로 건설분야 전체에 큰 영향을 끼쳤다.

건설중재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인테리어 분쟁으로 전체 중재사건 중 2/3 가량인 96건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분쟁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이 2006년에는 1건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5건으로 늘어났다.

한편, 건설중재 사건의 증가세와 더불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사건은 지난 2006년 215건에 비해 49%가 증가한 320건으로 105건이 늘어났으며 알선사건 역시 18건(3.4%)가 증가했다.

분쟁금액 또한 2,296억 원으로 2006년 1,623억 원에 비해 41.5% 늘어났다.

반면, 알선사건의 경우 2006년 534건에서 552건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분쟁금액은 2006년 296억 원에서 270억 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중재원은 중재사건 신청이 증가한데 대해 “중재사건 신청은 그동안 별다른 증가추세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난해 소규모 분쟁사건에 대한 중재비용의 대폭 인하와 적극적인 홍보, 집단중재 신청 등에 힘입어 증가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건설부문의 경우 중재의 유일성이 일반 건설업계에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중재의 효과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 지열냉난방 시스템 도입

대림산업은 독점에 짓고 있는 51층 높이 2개동 규모 ‘한숲 e-편한세상’ 전체에 국내 최초 지열

냉난방시스템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건물 내부 전체에 지열냉난방시스템을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숲 e-편한세상’은 전체 전력 소비량 70~80%를 자체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기로 누진제 적용 없이 지열설비를 100% 가동할 수 있다. 일반 아파트에 비해 에너지 절감효과가 훨씬 크다는 게 대림산업측 설명이다.

대림산업은 지열냉난방시스템을 활용해 아파트 및 건물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에 필요한 냉난방 비용을 각각 50% 이상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한숲 e-편한세상’은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에서 역대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급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 받았다.

플래티넘급 친환경 건축물은 에너

지효율 1등급(에너지관리공단)과 친환경건축물 최우수등급(주택공사 외)의 예비인증 동시획득을 의미한다. 플래티넘급은 국내 전체 건축물을 통틀어 ‘한숲 e-편한세상’이 유일하다.

KOSHA 18001 인증 확산

일반 이어 전문업체 속속 도입

재해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율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을 도입하는 건설업체가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발주기관과 삼성건설, 현대건설 등 일반건설업체는 물론이고 대명전설 등 전문건설업체도 자율안전경영에 나서면서 재해예방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대명전설이 전문건설업체로는 처음으로 자율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 인증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건설업 KOSHA 18001 인증을 획득한 회사는 2002년 삼성건설을 시작으로 롯데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등과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일반건설업체 9곳 및 발주기관 5곳이 전부였다.

그러나 이번에 대명전설이 전문업체로는 첫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대흥건설, 근보건설, 동인엔지니어링 등 전문업체들의 인증이 뒤따를 전망이다.

쌍용건설, 두산건설산업, 부산교통공사 등도 현재 인증 절차를 밟고 있어 전체적으로 모두 20여 곳에 이르는 건설업체 및 관련기관이 자율안전경영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명전설 관계자는



건강을 위해 남을 용서하는 방법

스탠포드대학의 소로센(Carl Thoresen) 박사는 “화를 품고 있는 것은 수명을 갉아먹는 독과 같다”고 말한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남을 용서하라는 것이다. 그가 제시하는 용서 비법은 이렇다.

- 분노를 확인한다 : 분노를 억제하려 하지 말라, 상황을 다시 되돌아보며 폭발적인 감정을 다시 한 번 생생하게 느

껴본다.

- 용서를 결정한다 : 상대를 끝까지 중요하며 계속 부정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용서하고 긍정적으로 살 것인가?
- 행동과 사람을 구분해 생각한다 : 내가 중요하는 것이 상대방의 행동인가, 아니면 사람 자체인가? 행동은 중요하되 사람은 용서한다고 생각하면 용서하기 쉬워진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건강상식사전」 중에서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조직을 구축하고 현장과 유기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해 7개월 만에 인증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에서 자율안전경영 인증 바람은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시스템 인증을 받은 건설업체들의 재해율은 1000대 건설업체 평균 환산재해율의 절반수준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관계자는 “시스템 인증 취득 업체들의 경우 자율안전관리 체제가 정착되면서 재해관리 능력이 두드러지게 향상되고 있다”며 “여기에 일부 대형건설사들이 협력업체에 대해 시스템 인증을 추천·지원하고 나서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일반·전문 건설업체들이 자율안전경영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P(자율준수프로그램) 모범운영업체에 혜택

공정위,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 **올** 해부터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를 잘 지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Compliance Program : 자율준수프로그램)를 모

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이며, 이 제도를 운영하는 업체가 부주의로 법을 위반하더라도 시정 조치, 과징금 등을 경감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은 CP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많은 과징금 감경 혜택을 부여해 사업자들의 자율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CP 운영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과징금 감경비율을 종전 20% 이내에서 15% 이내로 축소하되, CP 등급평가 결과 BB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5~15% 추가 경감을 인정기로 했다.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20% 이내 추가 경감은 종전대로 유지되며, CP 등급평가 결과 AAA 등급을 받은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매출액 등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 기본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사업자와 산업의 규모, 특성을 감안,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중대성·파급효과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산정한 후 위반행위 기간·횟수·부당이익 규모 등과 고의·과실·가담정도 등 행위자 요소

에 따른 임의적 조정을 거친 후 최종 부과 과징금을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산업분야의 사업여건 변화로 인해 최소 규모의 과징금만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 부과 단계에서 과징금을 50% 이상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위반행위에 직접 가담한 고위 임원이 법인 등기부 등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건설현장 일손이 모자란다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전환 1년, 4,400명 쿼터에 고작 700명

| **산** 업연수생제 대신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난해 1년동안 외국인력 도입이 부진에 빠져 건설현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력 도입이 산업연수생제에서 고용허가제로 전환되면서 대규모 SOC 건설현장을 비롯한 공동주택 건설현장이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내 취업 중인 외국인력은 작년 5월 말 현재 23만5,200여명으로 추정되고, 이 가운데 산업연수생 또는 고

용허가제로 입국한 1만400여명을 포함한 합법적 인력은 6만8,400여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불법체류자로 분류되고 있다.

여기서 건설부문의 외국인력은 산업연수생제가 시행되던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매년 5,000명 정도가 도입됐고 2006년에는 7,000명으로 늘어나는 등 3D업종으로 분류된 건설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돼왔다.

그러나 산업연수생제가 고용허가제로 변경돼 시행에 들어간 지난 한 해 동안 도입인원은 고작 725명에 그쳤다.

이는 산업연수생제도가 시행되던 때의 1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으로 가뜩이나 국내인력이 꺼리는 건설현장의 신규인력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2중·3중 규제 외국인력 도입 막아

더욱이 지난해 건설부문 외국인력 도입 쿼터가 연간 4,400명인데 실제 도입이 이처럼 부진한 것은 지나친 규제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외국인력 도입 및 송출기관이 정부기관으로 변경된 데 따른

비효율성을 들고 있다.

산업연수생제 아래 민간 송출기관과 연수추천단체를 폐지하고 각국 노동부에서 인력 송출 및 도입 업무를 수행토록 함에 따라 인력도입이 극도로 부진해졌다는 것.

즉 종전 민간 송출기관은 인력송출이 사업이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인력 모집에 적극적이지만 공공기관은 소극적으로 송출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애다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서 신설한 한국어능력시험은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인력도입을 막는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다.

하도급 규모에 맞게 인원배정 해야

공사금액별로 고용허용인원 산정 기준을 축소 운영하고 있는 것도 적정한 외국인력 도입을 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

원도급 업체의 공사금액에 따라 허용인원을 산정한 뒤 이를 하도급 업체에 분배하기 때문에 외국인력을 주로 사용하는 하도급 업체는 필요로 하는 인원을 배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토공사를 주로 하는 A전문건설업체 현장 관계자는 외국인력을 제때 제대로 배정받지 못해 20% 가까운 추가 공사비를 부담해야 했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원도급사인 B건설업체로부터 20여억원의 하도급공사를 수행했는데 원도급 업체에 배정된 외국인력을 다른 하도급 업체와 나누다보니 인건비를 필요 이상으로 부담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이에 따라 외국인력 배정인원을 원도급 업체가 아닌 하도급 업체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정부는 과도한 외국인력 도입으로 인한 국내인력 일자리 대체현상이나 인권침해 등을 관리하고 외국인력 도입 및 배정을 포함한 취업관리는 민간기관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16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체류자의 추가 발생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기업들이 고용허가인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강 상식

웃으면 살도 빠진다.

남녀가 섞여 어울리는 경우에는 여자가 얘기할 때보다 남자가 얘기할 때 더 많이 웃는다고 한다. 게다가 웃음은 살빼기 효과도 있다. 한 번 웃을 때마다 3.5kcal가 발산된다. 하루

에 100번씩 웃으면 무려 350kcal가 아닌가!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건강상식사전」 중에서